"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인수위, 3월 개정 소급적용 … 기업 세금 2조원 경감 효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반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이번 임시 국회서 개정안된다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확대는 올해 성장목표의 달성과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0년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인수위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 명의로 작성한 공문을 현 정부에 보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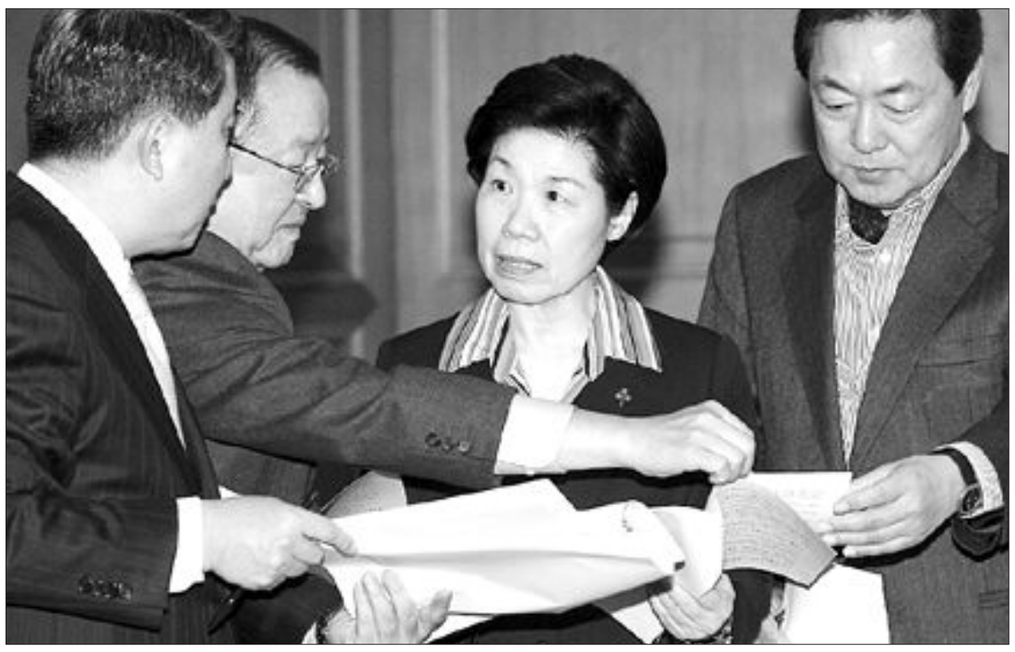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이후 5차례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됐으며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 개성공단 진출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만수 간사는 "현재의 투자부진이 지속된다면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경숙(왼쪽에서 세번째)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강만수(〃 두번째) 경제1분과위 간사, 맹형규(맨 오른쪽)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이동관(맨 왼쪽) 대변인 등과 함께 '기업 임시투자 세액 공제방안'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 압축

이경숙위원장·안병만 前외대총장·이원종 前지사등 약식검증 후보 정밀검증 …정보열람동의서 전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을 압축하고 정밀검증을 위한 개인 정보열람동의서 발송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10여명의 총리 1차 후보군 가운데 약식검증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보열람동의서를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1~2주 가량 소요되는 정밀검증에서는 후보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과거 행적,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재산형성 과정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게 되며, 정부전산망을 통해 납세 및 전과기록 등도 조회하게 된다.

앞서 이 당선인은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수위 출범 직전 동의서를 받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검증 대상으로는 이경숙 위원장과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이 우선 포함됐으며, 이원종 전 충북지사와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도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수일내에 동의서가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검증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약식검증에서 일부 결격사유가 발견된 후보 가운데서도 상속문제 등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후보가 검증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개적으로 총리직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히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 압승'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또다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기존 총리후보군 가운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당선인 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박근혜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다 강경일변도였던 박 전 대표측에서도 '수용' 가능성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뭔가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총리 인선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 후보군도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자 정책참모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수석 가운데서는 정무수석에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한 국민중심당 출신 정진석 의원과 권철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당선인, 美 국빈 방문 유력

3월 예정 …의회 연설도 추진

이르면 오는 3월 이뤄질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일 "당선인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몇 차례 미국측과 접촉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선 이 당선인이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7년 재임기간 국빈 방문은 5차례 밖에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는 부시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빈방문이 이뤄질 지는 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빈 방문은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공식환영식이 백악관에서 열리고 백악관 공식환영 만찬이 개최되는 등 의전 격식이 가장 높다.

이 당선인 측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상 국빈 방문에는 의회 연설이 일정에 포함되지만 설사 이 보다 격이 낮은 실무방문으로 정해지더라도 협의에 따라 의회 연설은 가능하다는게 당선인 측 설명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떠나는 미국 특사단이 방미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연설 여부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의회연설은 지난 1954년 이승만, 89년 노태우, 95년 김영삼, 98년 김대중 등 지금까지 4차례 이뤄졌다. /연합뉴스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할 방침"

이명박 당선인 "법 바꿔서라도 전문가 채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18일 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금감원에 부원장급으로 제가 미국에서 금융관련 거물인 윌리엄 라이벡이란 외국인을 모셔왔는데, 스페셜 어드바이저(특별고문)로 한정돼 활용이 안되니 챙겨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자, "아직 공무원법이 안 바뀌어서 공무원 채용이 안 된다고 한다. 고문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측이 20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그래서 외국인도 공무원 (으로 임용)하도록 (공무원)법을 바꿔놓자고 제안하려고 한다"며 "과거에는 이름만 걸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6조3항)라고 규정,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방부 보고 'MD'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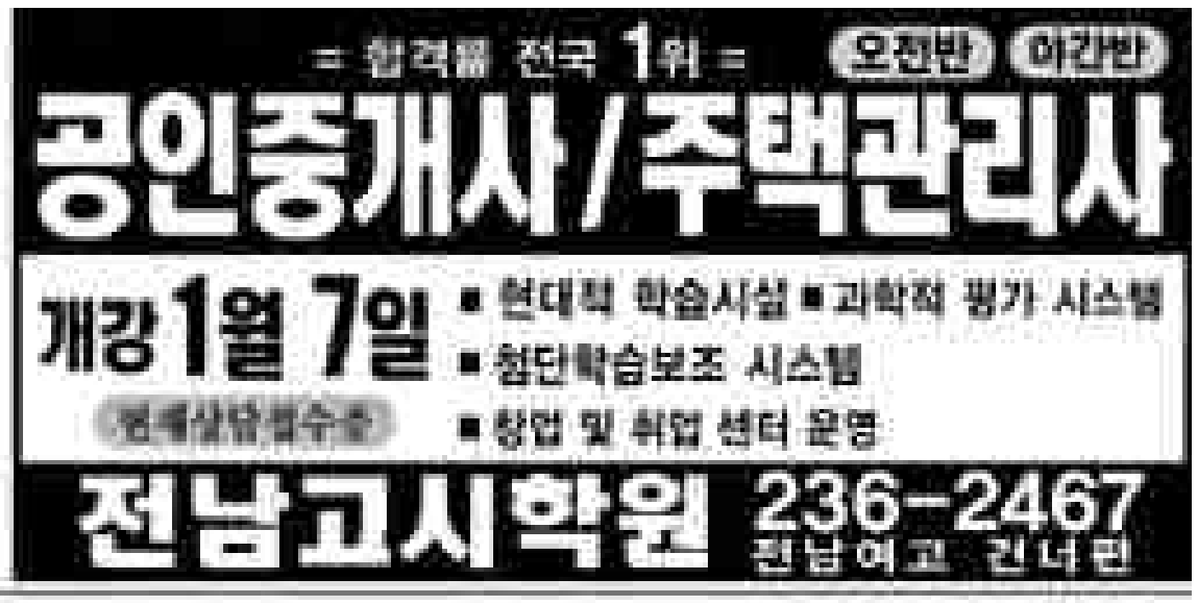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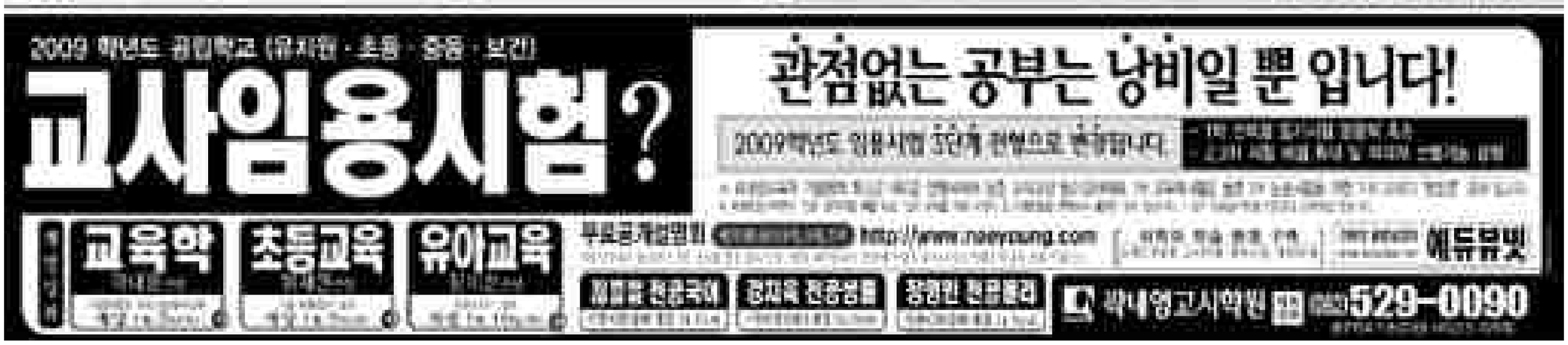
국방부의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지난 8일 인수위 보고 때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평화유지군 등 여러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며 "이 중 M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는 현안과 관련해 이런 여러 이슈들을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소개한 뒤 "개인적으로 MD 등은 차기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당 "정부 조직개편안 졸속 통과 안돼"

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21~22일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 첫날인 28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시기적 절박성을 이해하지만, 21일에 법안을 제출하고 28일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제출 7일만에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원안 그대로 국회가 거수기가 돼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실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처리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조직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챙기듯 마구 칼질할 사안이 아니며, 민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